

## 고용노동부 장관의 탁상공론식 ‘아무 말’ 대잔치

# “일자리 늘리면서, 최저임금·근로시간도 안착토록”

**이재갑 노동부장관, 첫 기관장회의**

고령자·5인미만 사업장 특별관리 청년 내일채움공제 등 추진 당부

취임 후 첫 산하 기관장 회의를 주재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에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더욱 어려움에 처해 있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 완화를 위한 노력에 신경써 줄 것을 당부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장관의 발언이 립서비스에 불과하다고 비판한다. 일자리 창출과 최저임금·근로시간 단축 정책이라는 양립하기 어려운 정책을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동시에 추진한다는게 가능하냐는 지적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기관장회의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 장관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요 간부와 지방노동관서장들이 참가한 전국기관장회에서 “일자리 문제 해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지방관서에서는 관내 고용 상황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에 집

중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과 사업장 발굴에 최선을 다해주고 하반기 지원이 확대되는 고령자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특별히 신경 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청년주가고용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청년층 대상 지원도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부연했다.

이 장관은 “지난달 고용동향이 다소 개선되기는 했으나 일자리 문제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여전한 상황”이라며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 속에서 현장과 직접 맞닿아 있는 우리 부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올해 말까지인) ‘계도 기간’을 ‘적용 유

예’로 인식하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갖고 지도해주고 충분한 시정 기회는 부여 하되 고의로 개선을 해태하는 사업주는 엄정 조치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에도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며 “현재 실시 중인 사업주·노동자 간담회, 현장 방문 등을 통해 현장 의견 청취에 노력해주고 특히, 산업별 위기 개편 및 최저임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과 관련해 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적극 안내해주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최저임금, 임금 체불 등 핵심 분야와 장애인, 외국인, 여성 등 취약 계층 보호에 감독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8월 말 기준 임금 체불 액이 전년 동기 대비 2364억원(26.5%) 증가한 만큼, 임금 체불 예방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세종=최신웅 기자 grandtrust@metroseoul.co.kr

## 김현미, 건설사 해외수주 지원 중동 방문

〈국토부 장관〉

UAE·쿠웨이트·카타르서 4박5일  
현지 진출기업과 합동간담회 개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국내 건설사의 해외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중동 3국을 방문한다.

15일 국토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오는 19일까지 4박 5일간 UAE(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카타르 등 중동 3국을 방문해 건설협력 및 수주지원 활동에 나선다.

이번 방문에는 해외인프라·도시개발 지원공사(KIND), 수출입은행 등 해외건설 정책금융기관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공항공사 등 인프라 공기업 및 건설·인프라 분야 민간 기업으로 구성된 지원단이 동행한다.

이들은 현지 진출기업과 지상사 등이

참석하는 합동 간담회를 개최해 해외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우리 기업의 현안해소를 지원할 방침이다. UAE에서는 올해 말에서 내년 초 벌주가 예상되는 주요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한다. 아울러 UAE 측의 현지화 기여수준 평가강화(ICV 제도) 등 애로사항을 듣고 정부의 지원방안을 논의한다.

쿠웨이트에서는 김현미 장관이 쿠웨이트 주택부 장관, 공공사업부 장관 등과 면담해 압둘라 신도시 건설, 쿠웨이트 공항 운영 등에 쿠우이트 정부의 전폭적 지원을 유도할 계획이다. 향후 지속 추진될 국가철도망·메트로 투자개발 사업(약 180

억 불) 등 주요 사업을 대상으로 우리 기업 참여 방안과 정부의 지원방안 등도 심도 깊게 논의한다. 또 쿠웨이트 국왕의 관심 사업으로 추진 중인 ‘자베르 코즈웨이’ 공사현장과 8월부터 운영 중인 쿠웨이트 공항 제4터미널을 방문해 시공상황 등을 점검하고 현장 근로자를 격려할 예정이다.

카타르에서는 2022년 월드컵 프로젝트와 연계한 침단 인프라 분야 협력에 나선다.

김 장관은 압둘라 알 타니 카타르 총리 예방 및 교통부 장관 면담을 통해 도하 메트로 그린라인, 하마드 국제공항 확장 등에 우리 기업 참여를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외건설 주력 시장인 중동권역 수주의 단비가 될 수 있도록 최근 유가상승과 중동국가들의 탈석유화 정책을 활용한 전략적인 진출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채신화 기자 csh9101@

## 러 극동지역 항만개발 협력

해수부, 타당성조사 용역 착수보고

정부가 신북방정책의 일환으로 러시아와 극동지역 항만개발 협력 추진에 나서 귀주가 주목된다.

해양수산부는 현재 추진 중인 ‘러시아 슬라비안카항 항만개발 타당성조사 용역’의 착수보고회를 16일 서울 용산역 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슬라비안카항은 한국·중국·러시아의 국경이 맞닿아 있는 러시아 극동지역인 연해주 남부지역에 위치한 항만이다. 때문에 우리나라의 북방물류는 물론, 삼국의 국제물류 요충지가 될 수 있는 항만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에 진행하는 항만개발 타당성조사는 지난 4월 러시아 정부의 요청에 의해 추진됐으며 용역업체 선정 등을 거쳐 착수보고회를 갖게 됐다.

보고회에는 북방경제협력위원회와 항만·물류기업, 금융기관, 학계 등 관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타당성조사의 추진방향과 슬라비안카항 개발계획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이날 제시되는 주요 의견들을 러시아 정부 및 관련 기업과 구체적인 논의를 거쳐 향후 용역과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우리 기업들은 예전부터 유라시아대륙의 교통·물류 거점이 될 극동 항만 개발에 관심을 보였지만 러시아 정세와 경제 등의 위험요소로 인해 투자 결정이 쉽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슬라비안카항 개발사업에는 항만 개발권과 부지 소유권을 소유한 러시아 유망기업 ‘베르쿠트(Berkut)’가 직접 참여해 투자 위험요소를 줄이고 우리 기업들의 관심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수부는 2019년 9월까지 슬라비안카항 개발사업 타당성조사를 마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관심기업들이 러시아 극동지역 항만 개발에 진출하는 데 도움이 되는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장기로 해수부 항만투자협력과장은 “이번 타당성조사 용역이 신북방정책의 기시적 성과 창출을 위한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세종=최신웅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국선변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15일 오후 3시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심포지엄을 연다.

서울변회는 현행 국선변호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해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시행 예정인 형사공공변호인제도의 올바른 운영방안을 제시하고 논의하는 장을 마련했다고 이날 밝혔다.

국선변호제도는 현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제도적으로 보장한다. 현재 형사피의자와 피고인 국선변호인, 국선전담변호사,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인, 피해자국선변호사 등 제도의 세분화와 다양화를 통해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의자와 피해자의 인권 보호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반면 국선변호인 제도가 다양한 만큼 불투명한 국선변호인 선정과정, 과중한 업무량, 예산 부족을 이유로 소홀한 국선변호인 처우 등 문제점 역시 지적된다.

/이병종 기자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임종현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5일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취재진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 ‘사법농단 핵심’ 임종현의 입 열릴까

검찰, 실무 총책임자 역할 의혹

국정감사를 앞둔 검찰이 임종현(59) 전 법원행정처 차장 조사로 사법농단 수사의 전환점을 마련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5일 임 전 차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중앙지검은 19일 국감을 앞두고 있어, 이날 조사 결과와 수사 진척도 등이 질의 내용과 수위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을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인물로 본다. 그는 2012년~2017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차장을 거치며 양 전 대법원장을 보좌하는 등 사법농단 의혹의 실무 총책임자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임 전 차장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미쓰비시·신일본제철 상대 민사소송 개입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화 관련 행정소송 개입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위기 당시 법리검토문 작성 등에 대한 의혹을 사고 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강제징용 소송 재상고심이 대법원에 접수된 직후인 2013년 10월 청와대를 찾아가, 주철기 당시 외교안보수석에게 소송의 방향을 설명하고 법관 해외파견을 늘려달라고 부탁한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6년 9월에는 외교부를 찾아가 정부 의견서 제출 등 절차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2014년 10월 전교조 소송서류를 대신 작성해주고 청와대를 통해 노동부에 전달하는 데도 임 전 차장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의심한다.

/이병종 기자 joker@

## 경제자유구역, 신산업 실험장 만든다

산업부, 혁신 추진협의회 개최

정부가 경제자유구역을 신산업 실험장으로 탈바꿈 시키기 위한 작업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전국 7개 경제자유구역과 함께 ‘제1차 경제자유구역 혁신 추진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경제자유구역이 상당부분 개발됨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본연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신산업 실험장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구

성됐다.

경제자유구역은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융합 환경, 국내외 기업이 협업 할 수 있는 글로벌 생태계, 혁신 인프라와 정주여건 등이 갖춰진 최적의 신산업 실험장이다.

협의회는 앞으로 경제자유구역에 신산업·서비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규제완화, 인센티브 패키지 지원, 애로사항 해결 등 선도과제를 발굴해나갈 계획이다.

/세종=최신웅 기자